

벤처투자 규제 완화·세제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민간 중심 벤처투자 활성화 위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발표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2026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다.

중기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벤처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해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투자 규제 개선, 세제 지원 확대, 벤처투자 생태계 기반 강화 등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벤처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 규제가 완화된다.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초기 투자 부담이 줄어든다. 그동안은 등록 후 매년 1건 이상의 투자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3년 이내 1건, 5년 이내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면 된다.

또 벤처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대기업집단에 편입되더라도 일정 기간 내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의무가 완화돼 투자금 회수 여건이 개선된다. 벤처투자회사 간 인수·합병 시 행정처분 승계 기간도 기존 무기한에서 2년으로 줄어들어 선의의 투자를 보호한다.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개별 펀드별 투자 의무를 폐지하고 전체 펀드 기준으로만 투자 의무를 적용해 보다 유연

한 운용이 가능해진다. 외국인 투자가 별도 협정 없이 달려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도 이미 시행 중이다.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최소 결성 규모는 1천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최초 출자금은 2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각각 낮아졌다.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에 출자할 경우 세액 공제율이 기준보다 높아지며,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하더라도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 범위를 모든 국가기금으로 확대해 연기금과 공적기금의 참여

를 유도한다. 모태펀드 존속 기간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인공지능(AI)과 딥테크 등 전략 산업에 대한 장기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과도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관행을 금지하는 규정도 확대 적용해 창업자와 투자자 간 신뢰를 높이고, 창업 실패 이후 재도전 환경도 개선하는 방침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은 벤처투자가 보다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전면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투자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지난 5일 전주에서 '2026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전문건설업계 도약·성장 이루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신년인사회 개최

전과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며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모두가 협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임근홍 회장은 또 "올해는 생산체계 정상화를 목표로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힘쓰고, 회원사의 권익 보호와 전문건설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영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전진하며 도전하는 자세로 전문건설업계의 도약과 성장을 이루자"며 회원들의 단합을 당부했다. /오상근 기자

건강보험·근로복지공단 데이터 연계 시스템 구축

자료 확보 기간 2주→1일 단축

국민연금공단은 데이터 연계로 장애 정도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보완 서류 제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기준에 2주 이상 걸리던 자료 확보 기간을 1일로 단축하면서, 디지털 정부 기조에 맞춘 '내국민 체감형 행정'이 실현될 전망이다.

해당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내역'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장해판정'이다. 이 자료는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기관 간 공문서로 주고받아야 했다.

공단은 이러한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 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공단이 시스템상에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원인은 서류 발급을 위해 두 기관을 전전

해야 했던 부담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번 개선은 공단이 지난해 추진한 '디지털 기반 대국민 서비스 혁신'의 일환이다. 공단은 앞서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주요 대형 의료 기관과도 업무협약을 맺고 진료기록을 데이터로 받고 있다. 공공과 민간 영역 모두에서 데이터 연계망을 넓혀 장애심사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취지다.

이러한 행정 처리의 간소화는 심사 전체 과정의 신속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민원인의 이동 비용과 행정 서비스 이용 문턱을 낮추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주 이사장은 "이번 데이터 연계는 국민의 번거로움을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디지털 행정 혁신의 사례이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데이터 연계 범위를 확대하여, 서류 없는 행정과 데이터 기반 심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중기청, 지방청 R&D 전라권 합동설명회 개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방청 R&D(창업설명기술개발-디딤돌) 전라권 합동설명회를 오는 1월 8일 오후 2시, 나리기움광주종합청사 1층 다목적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청 R&D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연구개발 과제 신청을 준비하는 창업기업과 중

소기업을 돋پ 위해 마련됐다. 전북중기청은 올해 업력 7년 이하 기업(신산업 창업 분야는 10년 이하) 가운데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이며,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성장기술개발-디딤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의 공고 기간은 지난

해 12월 23일부터 오는 1월 23일까지이며, 신청·접수는 1월 6일부터 23일 까지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지방청 R&D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를 비롯해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방법과 온라인 신청시스템 사용법을 설명하고, 질의응답과 협장 상담도 함께 진행된다.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이라면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코피아 센터 소장 공개 모집

농촌진흥청이 2026년도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센터 소장을 공개 모집한다.

농촌진흥청은 네팔, 도미니카공화국, 세네갈,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등 5개 국에 파견될 코피아(KOPIA) 센터 소장 5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피아(KOPIA)는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국제개발 협력사업으로, 개발도상국의 여건에 맞는 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소농의 소득 증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농업 분야에서 7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박사학위 취득 후 농업 분야 경력 3년 이상을 보유한 전문가다. 응시원서는 1월 2일부터 11일 까지 코피아 누리집 원서 접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선발은 서류 심사와 외국어·컴퓨터 능력 검정, 발표 평가 등을 거쳐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종합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오상근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 2급 이상 간부 인사 단행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조직개편을 반영해 지난 1일 자로 2급 이상 간부직원에 대한 승진 및 이동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1(가)급 이동은 총 5명으로, 재난안전처장에 오치영, 전기안전인재개발원에 박지영, 전기안전 인재개발원 담당에 박찬영, 경기북부

본부장에 이인수, 강원본부장에 김진태가 각각 발령됐다.

1(나)급 승진 이동은 2명으로, 디지털정보처 정보시스템부장에 김문필, 구미철곡지사장에 김성호가 임명됐다. 1(나)급 이동은 전기안전인재개발원 담당 김대일, 서산태안지사장 이상철, 평택안성지사장 박준성 등 3명이다.

2급 승진 이동 인사에서는 경기부 기술진단부장에 정병현, 전북본부 겸 사부부장에 진종수가 각각 발령됐다.

또한 2급 이동은 총 6명으로, 사업운영처 기술진단부장 조장호, 대구경북본부 겸사부장 김시중, 대구경북본부 기술진단부장 박재일, 대구서부지사장 임인수, 경남본부 겸사부장 정영기, 경남본부 기술진단부장 이병열이 자리 를 옮겼다.

/오상근 기자

농촌진흥청이 국가 가축유전자원의 안전한 보존과 악성 가축질병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5일 경남 함양군에 위치한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를 방문해 차단방역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청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악성 가축질병 발생 위협이 이어지고 있

는 상황을 언급하며, 질병 발생 이후 대응보다 사전 차단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염소 산업과 관련해 재래흑염소를 기반으로 한 신종종 개발과 첨단 번식·사양·질병 관리 기술 연구 현장도 함께 점검했다. 간담회에서는 가축유전자원 주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경의 사항을 청취했다.

/오상근 기자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 국번없이 112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